제 6 장　세계 경제협력 논의 동향 및 대응

제 1 절　DDA협상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국제협력기획단 사무관 이원희

1. WTO DDA협상 출범

2001년 11월 10일~14일 카타르 도하(Doha)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뉴라운드 출범을 최우선 과제로 협상을 진행하여 새로운 다자간협상의 작업계획 등에 관한 각료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 채택에 성공하였다. 또한 그간 뉴라운드 협상으로 불러왔던 WTO 출범이후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공식명칭을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로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DDA 협상 의제는 ①농업 ②서비스 ③비농산물 시장접근 ④반덤핑·보조금 등 규범 ⑤환경 ⑥지적재산권 ⑦분쟁해결 등 7개 분야이다. 도하각료선언문 합의에 의해 협상시한은 2005년 1월 1일 이전으로 하고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방식으로 협상합의안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또한 DDA협상의 감독을 위하여 일반이사회 산하에 TNC(무역협상위원회, Trade Negotiations Committee)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제1차 TNC 회의('02.1.28~2.1)에서 세부 의제별 협상담당 기구는 기존 기구(소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특별회의를 활용하기로 하되, 비농산물 시장접근 및 규범은 새로운 협상그룹을 설치키로 하였다.

2.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2002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어 농업, 서비스 등 7개 협상분야 및 개도국 개발에 대한 논의가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 이전까지 활발

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3년 9월까지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싱가폴 이슈 등 세가지 핵심 이슈에 대한 선개도국간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못했고, 이와 같은 선개도국간 극명한 입장차이를 극적으로 타결할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2003년 9월 DDA 중간평가를 위한 칸쿤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칸쿤 각료회의는 당시까지 전개된 분야별 협상을 중간점검하고 그 단계에서 회원국간 중간 합의를 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는 종전의 분야별 입장에 대해 상호간에 기존의 입장만 번복한 채, 싱가폴 이슈에 대한 선개도국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중요한 농업 이슈, 비농산물 시장접근 이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조차 하지 못한채 결렬되고 말았다.

특히 칸쿤 각료회의는 인도·브라질 등 강대 개도국들이 미국·EU의 협상 주도를 견제하면서 실질적인 협상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회의로 평가된다. WTO가 경제적 논의의 장이 아닌 개도국의 개발과 원조를 위한 정치적 연설의 장이 되어 간다는 선진국의 비판과,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개도국을 철저히 배제한 미국과 EU의 협상 태도를 이번에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인도·브라질 등의 확고한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칸쿤 각료회의 결렬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향후 미국·EU 그룹과 인도·브라질 등 G20 그룹간의 협상 주도권 다툼이 계속될 전망이다.

칸쿤 각료회의 결렬 이후 DDA가 좀처럼 협상 재개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자, 일반 이사회는 협상 그룹 의장 전원을 2004년 2월에 교체하고 2004년 3월부터 전분야 협상을 재개함으로써, DDA 협상의 복원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USTR 대표 죌릭도 2004년 1월 11일 148개 회원국 모두에 서한을 보내어, DDA 협상의 재개와 각국의 유연한 자세를 촉구함으로써, WTO 중심의 다자 무역규범 체제의 조속한 복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3. DDA 분야별 협상동향 및 전망

① 농업분야

농업부문은 기확정의제(BIA : Built-in Agenda)로서 2000년 3월부터 제네바에서 후속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농업협상의 목표는 시장접근(market access)의 실질적 개선과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export subsidies)의 단계적 폐지 그리고 무역 왜곡적인 국내보조(domestic support)의 실질적인 감축이다. 금번 협상은 이러한 협상목표에 대해 2003년 3월까지 협상 세부원칙(Modalties)에 대한 합의를 이루도록 하였다.

그러나 농업협상은 협상진행과정에서 수출국과 수입국간, 선진국과 개도국간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여왔고, 종전의 논의에서 좀처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칸쿤 각료회의 직전에 미국과 EU가 공동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종전에 NTC 그룹과 非NTC 그룹간의 대립구도가 미국·EU, G20 등 강대 개도국, 한국·일본, 스위스 등 수입국(G10)의 3각 구도가 이루어지는 등 복잡한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농업분야는 수출보조 철폐에 대한 EU의 미온적 입장, 수출 신용 철폐에 대한 미국의 애매한 태도, 관세상한 설정에 대한 한국·일본의 적극적인 반대, 전면적인 수출보조의 즉시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브라질·인도 등의 강경한 태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② 서비스분야

서비스부문 역시 기확정의제로서 추가 자유화를 위한 후속협상이 '00년 2월부터 제네바에서 시작되었다. 제4차 각료선언에서는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협상참여 회원국들에게 '02년 6월 30일까지 1차 양허요청안(initial requests)을 제출하고 '03년 3월 31일까지 이에 대한 1차 양허안(initial offers)을 제출하도록 결정하였고, 다른 분야에 비해 협상 진행이 순조로운 편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현재 36개국에 대하여 1차 양허요청안을 통한 시장개방을 요구하였고, 25개국으로부터 시장개방 요구를 받았다. 양자간 교환한 양허요구안을 바탕으로 우리측은 서비스 시장개방의 수위를 조율하는 1차 양허안을 작성, WTO사무국에 2003년 3월31일 제출하였

다. 그러한 양허안을 기초로 '03년 4월 이후부터 '05년 1월 1일 이전까지 다자간 내지 양자간 협상을 통해 각 회원국의 서비스분야에서의 추가 자유화에 관한 양허약속을 확정하게 된다. 우리 나라는 2003년 12월 현재 32개국과 7차례 60회의 양자협상을 개최하였다.

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협상은 지난 UR 서비스협상 이후 모든 서비스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포괄적 협상으로서, 지난 UR 서비스협상에서의 개방범위와 수준을 출발점으로 하여 협상이 진행되므로 전체적으로 UR에서의 개방약속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약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우리부는 소관분야인 유통, 비즈니스 서비스에서 전향적인 시장개방협상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개방을 지원하고, 개방의 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단, 전력부문과 가스부문의 시장개방은 국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이번 양허범위 결정시 신중히 접근할 계획이다.

③ 비농산물 시장접근

비농산물 시장접근(market access for non-agricultural products)협상은 공산품 및 임산물, 수산물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문제를 다루는 협상으로 도하각료선언에 의거, 첨두관세·고관세·경사관세의 제거 및 개도국 수출 관심품목에 대한 고려 등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S&D: Special & Differential Treatment) 부여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협상일정은 2002.12월까지 각국이 관세인하방식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3.5월까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방식(Modalties)에 대한 합의를 이루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EU, 일본, 중국, 인도 등 6개국이 2002.12월까지 관세인하방식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시장접근 협상그룹 의장인 Girard가 절충안이라 할 수 있는 의장안을 제시(2003.5월)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별다른 합의 없이 2003.5월 합의시한을 경과하였다.

Girad 의장안은 관세인하공식으로 선진국들이 선호하는 스위스 공식에, 개도국들이 유리한 관세평균 요소를 삽입함으로써, 관세평균이 높은 개도국의 관세감축률이 선진국보다 낮도록 만들었다. 또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비중이 높은 7개 품목(자동차부품, 전기전자, 가죽제품, 섬유·의류, 신발, 석·보석·귀금속류, 수산물)을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여 무세화할 것을 제안했다.

2003.9월에 있을 제5차 칸쿤 각료회의를 앞두고도 선·개도국간 이견차가 계속되자 2003.8월, 미국과 EC, 캐나다 3국은 시장접근협상의 Modalities에 대한 공동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제안서는 의장공식에서 관세평균 요소가 배제된, 원래의 스위스 공식을 채택하는 대신, 개도국 S&D차원에서 개도국에 대해서는 선진국보다 높은 계수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나,(계수가 높을수록 관세감축률이 낮아짐)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섬유를 비롯한 개도국 수출관심품목과 환경상품 등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무세화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개도국은 동 제안서가 선진국에 유리한 제안이라고 반박하고, 평균관세 요소가 포함된 원래의 의장공식의 채택을 주장하며, 다만 선진국 공동제안서상의 개도국에 대한 더 높은 계수 부여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임을 언급하였다.

결국 최빈국을 제외한 주요 개도국에 대해 선진국과 동등한 관세감축의무를 요구하는 선진국 측과, 개도국 전체에 대한 대폭적 관세의무 경감 등 S&D를 요구하는 개도국 측의 대립은 칸쿤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싱가폴 이슈의 결렬을 이유로 제5차 칸쿤 각료회의는 폐막되고 만다.

칸쿤 이후, DDA협상은 제네바 차원에서 일반이사회를 통한 논의만 진행되어 왔다. 일반이사회 논의에서, 비농산물 협상의 경우 Derbez text를 향후 협상재개의 기초로 한다는데 대부분의 회원국이 동의하였다. Derbez text란, 칸쿤 각료선언문의 2차 수정안(2nd revision)으로 각료회의 개최지인 멕시코의 외무장관 Derbez가 수정한 안을 말한다. Derbez text는 구체적 공식을 포함하지 않은 전반적 틀(framework)로, 관세인하공식은 비선형공식(non-linear formula)으로, 분야별 무세화는 공식과 함께 핵심이슈로 인정하되, 모든 회원국의 참여를 위해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을 부여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후 협상재개를 대비, 산자부에서는 우리 국내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함과 동시에, 관세정점·고관세 등 선진국의 일부 품목에 대한 고율관세와 개도국의 전반적으로 높은 관세장벽을 대폭 삭감하여 우리의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다.

④ 규범분야

규범분야는 반덤핑·보조금 및 지역협정 관련 현행 WTO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시작된 협상으로 도하 각료선언문에서는 관련 규범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수단 및 목적을 유지하면서, 협상의 초기단계

에서는 무역왜곡적인 관행에 대한 규율을 포함하여 명확화 및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제시하고, 후속단계에서는 해당 규정의 명료화 및 개선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본 등 반덤핑 Friends 국가는 반덤핑조치가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저해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개시 기준강화, 덤핑마진 산정방법의 합리적 개선 등 33개의 우선 개정대상을 논의의제로 제시하였다. 당초 33개 이슈 모두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6개는 기제출)이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식하고 관련 이슈별로 grouping하여 제출하기로 최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반덤핑협정 개정에 소극적 입장으로 반덤핑협정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무역구제조치를 야기하는 무역왜곡적 관행(덤핑, 보조금)의 규제에 협상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향후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조금분야에서는 보조금 개념의 명확화, 2000년 1월 1일부로 소멸된 허용보조금의 부활 및 개도국에 대한 허용보조금 범위확대, 상계관세 조사절차 규정의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개도국의 보조금지급을 규제하려는 미국 등 선진국과 자국의 보조금지급을 확대하려는 인도 등 개도국의 입장대립이 명확한 상황이다.

반덤핑 분야는 칸쿤 협상 결렬 이후에도 반덤핑 프렌즈 그룹회의는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반덤핑협상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서 제출을 보다 가속화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보조금 분쟁 등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감안, 당분간 논의 추세를 주시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예정이나, 점차적으로 이슈별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⑤ 환경분야

환경 이슈는 현재 WTO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 CTE)에서 논의 중에 있는 의제로서 제4차 각료회의에서 EC의 강력한 주장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에 포함되었으며, WTO 기존 규범과 다자간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상의 특정무역의무와의 관계, MEA 사무국들과 WTO 관련 위원회간 정기적 정보 교환 절차 및 옵저버 자격 절차,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등이 협상의제로서 논의되고 있다.

또한 검토의제로서 환경조치의 시장접근에 대한 효과, 무역규제 및 왜곡의 철폐 또는 삭감이 무역·환경·개발에 기여하는 상황,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의 관련 규정, 환경 목적의 라벨링 요건이 논의되었지만, 2003년 9월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결렬되어 협상의제화에 실패했다.

⑥ 싱가폴이슈

제 5차 칸쿤 각료회의에서 싱가폴이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로 협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현재는 분야별 향후 협상개시 여부와 협상 모델리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투 자

8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외국인투자(FDI:Foreign Direct Investment)가 급증하고 투자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투자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시장현황에 맞는 강력한 다자간 투자규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다자간 투자 규범은 그동안 OECD 다자간 투자협상(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과 WTO 투자 논의가 병행되어 왔으나, MAI 협상이 각 국간의 이해 관계, 동아시아의 금융위기

등으로 실패한 이후, WTO에서의 다자간 투자규범 제정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WTO DDA 투자 논의는, 무역과 투자 작업반(Working grou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Investment)에서 제5차 각료회의 전까지 투자의 정의와 범위, 투명성, 무차별원칙,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대한 명확화 작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으며, 투자분야 협상개시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실정이다.

㈏ 무역원활화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는 무역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를 통해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국가간 교역, 투자, 산업 발달에 기여 하고자 논의되고 있다. 무역원활화 이슈는 신속한 수출입절차, 무역규정의 투명성 증대 등을 그 기본 골자로 하여, 무역업자들의 시간과 비용적 측면의 손해를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WTO 차원에서의 무역원활화 논의는 상품 무역 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에서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 절차 및 관련 수수료), 10조(무역 규정의 공표 및 시행)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 의제 논의와 관련하여, 선진국들 측에서는 전자 무역의 활성화, 서류요건 및 수수료의 간소화,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통한 규정의 투명성 증진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 측에서는 기술 지원, 능력배양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향후 협상개시와 관련해서 나머지 3개의 싱가폴이슈에 비해 협상 개시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 경쟁정책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관세 및 수량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국경장벽이 낮아지고 외국기업 및 제품에 대한 무차별대우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민간부문의 반경쟁적 행위 및 독점구조 등이 시장접근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WTO에서는 1996년 12월 제1차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경쟁정책 작업반”을 설치한 이래 무역과 경쟁정책간의 상호관계 및 다자간 규범의 형태에 대하여 논의해 왔고, 이후 투명성, 비차별원칙, 공정한 절차, 경성 카르텔 규제, 개도국의 제도적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협력 방안 등 경쟁정책이 WTO 원칙과 국제무역 증진에 부합되도록 하는 다자규범의 요소에 대해서 논의되었다.

㈑ 정부조달투명성

현재 WTO 정부조달위원회의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개정작업과 같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부조달협정(GPA)이 일부 국가들(28개국)만 참여하는 복수국가간 협정인 점을 감안, 정부조달관련 논의를 다자무역체제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은 시장개방이 아니라 단지 정부조달과 관련된 전 과정 즉, 입찰공고부터 낙찰까지의 과정과 이때 쓰이는 각종 법령, 기준, 규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협정이다. 현재 선진국들은 다자협정의 첫 단계로서 투명성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조기협상 반대와 위 협정의 범위를 최대한 협소하게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4. DDA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

DDA협상은 전세계적으로 교역장벽을 낮추고 국제무역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다. 경제발전과정에서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DDA협상을 새로운 경제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DDA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산업에 유리한 무역환경을 조

성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우리정부는 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정점으로 범정부차원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조정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안을 작성하는 등 DDA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01.9월에 설치된 대외경제장관회의는 DDA협상에 대한 우리정부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부처간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DDA협상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점은 민간의 참여증대와 홍보기능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부총리와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DDA대책 민관합동포럼」을 개최하여 협상안 마련시 민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다. 또한 국정홍보처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홍보대책반」을 운영하여 협상결과에 대해 범국민적인 이해와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여 협상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범정부적 DDA협상 체계내에서 산업자원부는 소관분야별 협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경제부처중 가장 먼저 DDA협상 준비를 전담할 「국제협력기획단」을 출범('01.12)시켰고, '99.8월 이후 공석인 주제네바 상무관(3급)을 부활시켜 향후 협상을 위한 조직정비에 착수하였다. 분야별 협상으로는 반덤핑 등 규범분야, 공산품 시장접근, 유통 및 에너지서비스, 투자, 무역원활화 분야에 대한 민·관 합동의 「산자부 분야별 대책반」회의를 개최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그룹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협상안과 협상전략을 수립하여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업계의 협상참여를 위해 제네바 현지의 협상진행 상황을 설명회, 간담회를 통하여 업계에 수시로 전달하여 DDA협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협상경과에 대한 민간부문의 환류(Feed-back)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제 2 절 OECD 활동 및 논의동향

국제협력기획단 사무관 한상우

1. OECD 개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개방적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존중을 3대 기본가치로 삼고 세계무역의 확대와 세계경제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이다. OECD는 무역, 투자, 금융, 고용, 환경, 과학, 기술, 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 WTO, UNCTAD, ILO 등 여타 국제기구보다 먼저 논의를 시작하고 규범을 제정하는 한편, 이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OECD가 과거 반덤핑, 비관세장벽문제,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 GSP) 제도 등의 토의를 주도하고, 환경문제의 국제적 이슈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선진경제 운영의 지식과 경험의 산실로서 OECD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OECD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정책을 발굴하여 회원국들에게 이해를 권고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식품안전, 국제이주 등의 이슈에 관한 국제규범을 도출하는 논의를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국제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급변하고 있는 국제사회환경에서 각종 경제행위를 좀더 효율적으로 규율할 틀을 만들어 세계경제의 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이다.

OECD의 3대 가치는 우리 정부의 이념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바,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가 세계 일류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OECD 규범 제정과 확산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부는 무역위원회(국제협력과), 산업및기업환경위원회(산

업정책과), 국제투자및다국적기업위원회(투자정책과), 철강위원회(자본재통상팀), 조선작업반(자본재통상팀), 국제에너지기구(자원정책과, 자원기술과), 지역개발위원회(균형발전정책과) 등 OECD의 각종 위원회 및 기구에 주관부처로서 참여하여 왔으며, 수출신용(수출과), 규제개혁(산업정책과, 정책평가담당관실), 다자간투자협정(투자정책과),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총괄과), 기업지배구조(산업정책과),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투자정책과) 등 주요 논의에 타 부처와 공조하여 참가해 왔다.

2. 2003년 OECD 각료이사회

2003년도 OECD 각료이사회가 4.29-30간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금년도 이사회에서는 30개 회원국 이외에도 특별초청 개도국 10개국 각료들도 참가하였다.

"성장과 개발을 위한 아젠다(Agenda for Growth and Develop ment)"라는 주제로 열린 금년도 각료이사회에서는 이라크 전쟁 이후 세계경제 회복전망 성장을 위한 정책방안,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DDA 협상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OECD의 기여방안등을 논의하였다.

2003년 각료이사회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계경제 현황평가에서 OECD권 경제가 올해 1.9%의 GDP 성장에 그칠 전망이나, 하반기부터 경기의 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에는 3.0%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최근 경기둔화의 근본요인은 지정학적인 이유보다 구조적인 문제에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의 유지 및 통화·재정정책간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둘째,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각료들은 지식정보 사회의 가속화, 인구의 고령화 추세속에서 노동력 활용의 극대화, 생산성 제고, 신기술 개발 및 기업혁신등이 향후 세계경제 성장의 주된 동력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구조개혁과 관련, '개혁이 없이는 성장도 없다'는 인식하에서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된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시장, 기업지배구조등 분야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 각료들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민간투자가 긴요하다고 강조하고,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정치안정, 부패방지 등 개도국 자체의 노력 및 선진국의 기술지원, 시장개방 확대 노력 필요성도 지적하였다. 특히 동 세션에 참석한 우간다 등 8개 개도국들은 자체적인 투자유치노력이 별반 성과가 없었다고 언급하고 이보다는 개도국이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대외시장 확보가 더욱 긴요하다고 호소하였다.

넷째, DDA 협상 성공 및 칸쿤 WTO 각료회의 준비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었다. 우선적으로 참석 각료들은 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칸쿤 제 5차 각료회의를 성공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강력한 정치적 의지결집이 긴요하다는데 모두 공감하였다. Supachai WTO 사무총장은 OECD 국가들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후, 특히 농업과 개발문제가 DDA의 핵심사항이라고 하면서, 회원국들이 유연성을 발휘할 것으로 촉구하였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집트등 개도국들은 개발관련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고, 특히 농업분야에서의 성과 없이는 DDA 협상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OECD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각료들은 OECD가 그간 추진해온 개혁작업을 지지하면서, OECD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위원회 조직 개편 추진, 제한된 분야에서 다수결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일부 각료들은 OECD 회원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동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와 같이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에 대한 특별 고려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3. 주요 이슈별 논의

OECD에서 논의되는 이슈들은 매우 광범위하다.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회원국간의 정책연구·협력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도 다양한 경제이슈에 대해 유럽, 미주, 아시아 지역의 주요 회원국들이 골고루 참여하여 선진적 경험과 분석력을 토대로 지속적인 정책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OECD에서는 아래의 이슈 외에도 노동, 뇌물, 환경, 조세 등에 관

한 논의, 그리고 새로운 회원국 가입문제 및 OECD 조직내부 개혁방향 등에 대한 문제도 주요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1) 산 업

산업 및 기업환경위원회에서는 Growth Project의 일환으로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미시정책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진행중에 있다. 이를 위한 세부분야별 작업으로는 창업 및 기업가 정신, 기술혁신 및 확산, IT 편익실현 등이 현재 검토 진행중에 있으며, 숙련노동자 부족, 인력수급의 matching 및 mobility 향상, 여성인력 활용 등에 대해 연구계획하는 인적자원프로젝트도 추진중에 있다. 또한 정책 벤치마킹, peer review 등을 통해 분야별 국가간 비교분석 및 공통점 도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별 논의결과 및 정책건의등은 2004년 관련 OECD 각료회의에 보고예정으로 되어 있다. 또한 2003년 각료회의의 후속조치로 서비스경제 프로젝트(서비스산업의 경향, 서비스부문 성장촉진요인,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상호작용)를 확정하고 2004년중 본격적인 연구할 예정이다.

(2) 무 역

무역위원회의 2003-4년도 사업계획은 ① 무역자유화 기반을 강화하고 ② 민감분야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③ WTO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④ 수출신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2003년도 상반기에는 4월 각료이사회의 통상장관세션 논의를 통하여 DDA에 대한 OECD 기여방안을 모색하고 농업·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싱가폴 이슈, 환경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무역분야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여 9월 WTO 칸쿤 각료회의를 앞두고 OECD 회원국간 의견조율 및 선진·개도국간 이견해소에 노력하였다..

2003년도 하반기에는 9월 칸쿤 WTO 각료회의가 실패함에 따라 칸쿤 이후 OECD가 DDA협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논의를 가졌고 이에 따라 향후 OECD작업방향을 설정하였다. 2003년 12월 작성한 “칸쿤이후 OECD 역할”에 대한 무역국 사업계획안에 의하면 ① 주

요 비회원국의 농업정책 검토 ② 무역과 구조조정 ③ 개도국 관심품목 ④ 지역중심의 비회원국 능력배양활동 ⑤ 개도국 특별대우 등 5개 이슈별 사업계획안을 제시하였다.

2003년도 무역분야 활동을 평가해 보면, 상반기에는 OECD 각료급·고위급 및 실무급 논의를 통하여 칸쿤 회의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가시적인 기여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월 칸쿤 회의에서 OECD 주요 회원국인 미국, EU, 일본이 G20 등 개도국 그룹의 농산물 시장개방, 싱가폴 이슈의 협상배제, 개도국 특별대우에 대한 요구에 대해 단합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향후 OECD 국가간에 입장 조율이 더욱 요구되는 부분으로 관찰되었다. 2003년도 하반기에는 칸쿤 이후 OECD가 DDA 협상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방안마련을 위하여 이사회, 무역위원회를 비롯하여 분야별 회의에서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스웨덴의 무역자유화와 구조조정작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채택되어 무역자유화를 위한 각국정부의 국내정책대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2003년중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개도국세분화 분석작업을 사무국이 수행하는 것을 중단시켰고, DDA 협상진전을 위하여 개도국의 무역자유화 비용측면에 대해서 OECD가 분석작업을 강화해야 할 것을 강조하여 향후 OECD 작업계획에 반영하게 된 것은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로 꼽을 수 있다.

(3) 투 자

현재 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에서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의개최 전에 WPD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발전방향, 운영과 관련되어 NCP에서 제기된 사례 검토 등을 행하고 있으며 회원국별 연락관(NCP : National Contact Point)을 구성해 연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각국의 가이드라인 운용사항 점검하고 있다.

또한 DDA협상 등과 관련된 투자관련 정책분석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보호 문제로서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간접수용”, “국제투자규범상의 MFN 조항분석” 등의 논의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투자에 있어 환경요인에 대한 연구강화를 위하여 환경위원회와 공동작업 실시하고 있으며 '03년 각료회의의 후속조치로 개발과 투자를 연계해 개발도상국 개발을 위한 투자틀 창출방안, 개도국 투자환경 제고 촉진 논의,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공적개발원조(ODA)간 시너지제고 등 논의하고 있다.

(4) 자원

IEA에서는 하는 업무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정책 현안 및 중장기 연구과제 논의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IEA에서는 2003년 세계 에너지투자 전망 발간, 회원국의 기후변화관련 정책에 대한 D/B 구축, 기후변화협약하의 탄소분리 및 저장 문제 연구, 가스공급안보에 관한 연구, 경쟁적 전력시장과 안정적·효율적 송전망간의 관계 연구, 자유화된 전력시장 내에서의 발전부문 투자에 대한 연구 등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비회원국의 에너지동향 파악 및 협력강화방안 모색을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중국, 인도, 동남아, 동북아, 중동, 러시아, 카스피해 연안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 및 동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세번째는 석유시장 동향분석 및 비상대응능력 강화로써 제3차 비상대응훈련을 통한 석유위기 대응능력 강화방안 논의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등 비회원국의 석유위기대응능력 강화 지원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하는 것으로 들 수 있다. 특히, 수소 경제로의 이행노력이 미국 주도로 가속화됨에 따라, IEA는 회원국간 수소·연료전지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수소협력그룹(HCG)을 설치하고 있다.

(5) 전자상거래

한국은 OECD의 회원국이 된 이후 전자상거래 관련 OECD 공식회의 뿐만 아니라 각 이슈별 비공식 토의과정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OECD내의 전자상거래 논의를 총괄하고 있는 정보통신컴퓨터위원회(ICCP) 산하

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정책작업반(WPTISP), 정보경제작업반(WPIE), 정보보호 작업반(WPISP), 정보화사회지표작업반(WPIIS) 등 4개의 작업반이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정책작업반(WPTISP)에서는 시장접근과 규제완화,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인프라, 통신인프라 및 서비스의 융합, 인터넷 발전 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정보경제작업반(WPIE)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사회·경제적 영향, IT분야와 관련된 분석과 정책 이슈, WPIIS와의 수평적 협력, IT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연구 등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정보보호 작업반(WPISP)에서는 사생활 보호 및 정보보호 등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정보화사회지표작업반(WPIIS)은 IT분야와 관련된 지표 데이터베이스 개발 유지, 전자상거래의 측정, ICT와 콘텐츠 분야의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정의의 개발, 전자상거래 및 각종 통신 분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각국의 서베이 상호 비교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표준적인 절차 등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WPIE는 논의의 중심이 인프라 구축에서, 구축된 인프라를 토대로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관련 기술의 적용 및 이용으로 옮겨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ICT 자체에서 ICT의 보급 및 이용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고 두 번째 정보전달의 양에서 질로 관심이 이동하며 세 번째 서비스 경제(e-Learning, e-Health)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6) 조 선

1994년 12월 세계조선시장의 정상적 경쟁조건 마련을 위해 미국 주도로 OECD내에서 조선협정 체결이 체결되었으나 미국 의회의 비준거부로 미발효 상태였다. 그러나 세계조선시장의 수급불일치 및 수주가격 하락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을 제외한 OECD 조선산업 보유 회원국들이 새로운 조선 협정 체결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2002년 4월 OECD 조선 작업반에서 신조선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협정 교섭을 위해 특별협상반(Special Negotiating Group)을 한시적으로 2004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매년 3-4차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차 SNG가 한국, 일본, EU, 중국 등 주요 조선국이 참여한 가운데 2002년 12.5~6 양일간 개최되었다. 사무국이 제시한 의제(안)로는 향후 협상의 기본틀, 협정에 포함 가능한 주요 요소, 정부지원조치 및 가격관행 등 경쟁조건 왜곡 관행 등이었으나, 각 참여국이 기본입장을 개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각국은 신조선협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SNG 구성범위, 협상의 구성요소(elements), 94년 협정의 적용수준 등을 중심으로 입장차이 가 분명히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제2차 회의는 2003년 4. 9~10일에 열기로 합의하였다.

2003년도에는 4차에 걸친 SNG회의를 통해 신조선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주요 사항으로는 첫째 한국의 주도로 조선 산업계 청문회 (Industry Hearing)개최(10.20-21, 동경)하였으며 두 번째 94년 협정의 피해가격제도 문제점을 지적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효과적으로 저지한 것, 세 번째는 중국등 주요 비회원국의 협상참여 실현 및 공조가능성 모색한 것을 들 수 있다.

현재 OECD 新조선협상 발효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3년부터 정부지원조치 및 가격관행규율 등 핵심이슈들을 논의중(2005. 12 타결 목표)에 있다.

(7) 철 강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철강수출이 미국으로 집중되면서 98년 미국의 철강 수입이 급증하게 되자, 2000년 11월 제57차 OECD 철강위원회 회의시 미국은 MSA(다자간 철강협정)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OECD철강위원회가 국제 철강교역질서 확립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이라는 인식을 표명하였다. 2001년 6월 미국 USTR은 201조(긴급수입제한)에 의거, ITC에 산업피해조사 개시를 요청하였으며, 2002년 3월 판재류 등 총 14개 품목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EU, 우리나라, 일본 등은 미국의 동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OECD 철강고위급회의를 통해 추구해 온 세계 철강문제의 다자적 해결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이러한 갈등관계 속에서 2001년 9월부터 6차례에 걸친 OECD 철강고

위급 회의가 개최되어 철강산업의 과잉설비폐쇄 및 규범정립 추진하였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98-2005년간 세계 40여 주요 철강 생산국의 과잉설비 1억4천만톤 폐쇄 추진하였고 두 번째 보조금 협정을 우선으로 하는 철강무역 다자간 규범 정립을 추진하였으며 세 번째는 03.12월 이후 조문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브라질 등 주요 비회원국의 참여확보로 세계 철강산업의 생산 및 무역질서 확보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2001.9월 이후 현재까지 6차에 걸쳐 고위급회의를 통해 철강분야 보조금과 관련된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며 세부적으로 허용보조금의 범위, 개도국 우대조항 등과 관련 협상국간의 입장 차이 조율중에 있다.

(8) 지역개발

OECD는 최근 중앙정부의 거시경제정책만으로는 구조적인 실업 및 경기침체의 해결이 곤란하다는 점을 인식, 99년 5월 종래에 산재한 지역개발관련 회의체를 통합하여 지역개발정책위원회(TDPC)를 설치하였다.

본회의는 통상 연2회 개최되며 지역개발정책 고위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위원회 사업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산하 작업반으로 지역지표작업반, 도시지역정책작업반, 농촌지역정책작업반, 지역경제고용개발프로그램(LEED) 등을 설치 운영하면서 특별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지역개발정책위원회에서는 지역개발정책의 현실적 활용을 위하여 회원국의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검토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2년에 국가단위의 지역개발정책 검토를 받은바 있으며, 2003년 7월부터는 부산시에 대한 지역개발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서울시의 청계천 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검토 실시문제에 대하여 사무국측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4. 향후 전망

변화하는 국제경제 환경하에서 OECD의 위상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활동 우선순위, 위원회 구조, 비회원국과의 관계, 다른 경제 기구와

의 협력방안 등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 사무국은 최근 6개 핵심과제(① OECD 활동 우선순위 재검토, ② 위원회 구조의 재설계, ③ 수평협력 증진방안 모색, ④ 산하 부속기구와의 협력강화, ⑤ 회원국 확대전략 검토, ⑥ 국제경제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OECD 역할 증진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개혁방향 수립을 위한 작업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OECD는 이러한 내부 조직개혁 문제뿐만 아니라 2004년 세계경제의 화두인 DDA 협상에도 적극 기여하고자 다양한 연구(개도국 지위, 규범 등)를 수행하고 있다. 가입 8주년을 맞는 우리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OECD를 우리 국익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절 APEC 활동 및 논의동향

국제협력기획단 사무관 권혁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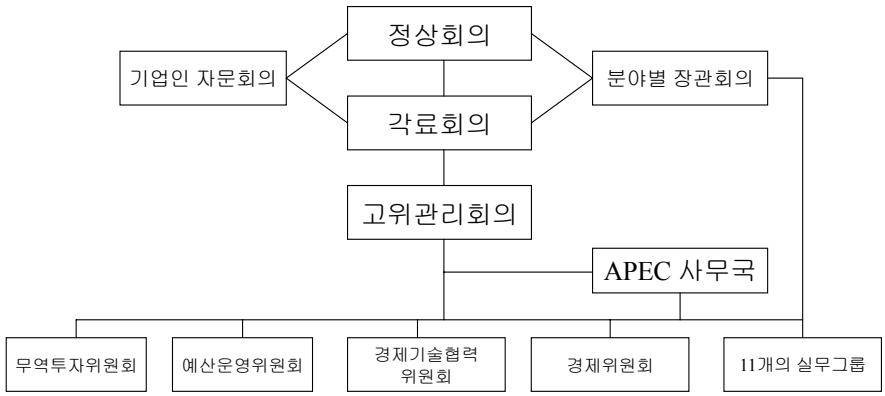
1. APEC 개괄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은 '89.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출범하였다. APEC은 자발적 협력(voluntarism)의 정신을 바탕으로 회원국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후생증진과 궁극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역내의 안정과 번영의 달성을 위해 역내·세계경제의 도전에 공동 대응하고 역내 재화·용역·자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투자 장애의 제거

등을 그 협력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등 21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APEC은 전세계 GDP의 약 62%, 교역량의 약 47%를 점유하는 최대의 지역협력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PEC은 매우 독특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APEC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가 매년 1회 당해 의장국에서 개최되며 정상 및 각료들은 APEC 발전을 위한 목표 및 원칙을 채택하고 구체적 이행을 고위관리회의(SOM)에 지시한다. 고위관리회의(SOM)는 연3회 당해 의장국(2003년 태국, 2004년 칠레)에서 개최되어 정상 및 각료회의에서 지시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분야별 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에서 협의한다. 운영체제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I-6-1> APEC 운영체제



2. 2003년 제11차 APEC 정상회의

제11차 APEC 정상회의가 2003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미래를 위한 파트너쉽, 반테러 등을 주요의제로 하여 개최되었다. 금번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 인간안보 강화, 세계화에의 기여도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 등이 담긴 `미래의 동반자 관계에 관한 방콕선언'을 채택하였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발발한 SARS 및 바이오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등 보건안보 강화전략을 제안하는 '보건 안보에 관한 정상성명'을 별도로 채택하였다.

3. 주요 이슈별 논의

2003년에는 에너지 장관회의, 중소기업장관회의 및 통상장관회의 등 분야별 장관회의 및 4차례 고위관리회의, 각종 위원회 및 실무그룹 회의 등이 개최되었다. 특히 무역투자 자유화 및 반테러협력을 기조로, 주로 재정·금융개혁 추진, 테러자금지원 방지, 무역원활화, WTO 협상 진전 기여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 APEC 무역 투자 원활화 및 자유화

무역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이행 협의는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f Trade and Investment, CTI)를 통해 수행되어 정상과 각료회의 및 고위관리회의(SOM)에 보고된다. CTI 산하에는 통관절차와 표준적합에 대한 소위원회를 비롯하여, 시장접근, 투자 등의 6개의 전문가 그룹이 운영되고 있다.

2003년에 CTI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CAP의 개선, 상해 합의 이행, WTO 협상에 대한 기여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상해합의 이행을 위하여 상품과 사업자의 이동, 표준, 전자 상거래 등에 대한 무역원활화 행동 계획이 설정되었고 역내 거래비용을 줄이고 객관적인 무역원활화 평가 기준을 모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SCCP(통관절차소위원회), SCSC(표준적합소위원회), ECSG(전자상거래조정그룹)등 산하 위원회 및 회원국들에서

Menu of Options에 포함될 구체적인 행동 및 조치를 제출하였다.

동 Menu에 대한 각 국의 선정 및 이행 사항은 2003년 제1차 SOM에서 논의 되었다. 또한 각국의 무역-투자 원활화 및 자유화, 시장 개방 정책 등을 검토하기 위한 각 국의 IAP(개별행동계획)가 제출되었으며, 우리 나라의 무역-투자 원활화 및 시장 개방에 대한 IAP Peer Review가 2003년 8월에 실시되었다. CAP(공동 행동 계획)와 관련해서는 e-IAP 시스템 개선, APEC 관세 데이터베이스(Tariff Database) 구축, "국경간 M&A에 관한 연구"(Study on 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의 연구 1단계를 끝마치는 등 몇 가지 성과가 있었다. 또한, Pathfinder Initiative로서 사전승객제도, 전자원산지증명, 통관업무 개선 등이 논의되었다.

(2) 투 자

CTI의 산하 회의 중 하나인 투자전문가 그룹 회의(Investment Experts Group, IEG)에서는 APEC의 투자 관련 자유화 및 원활화 목표 달성을 위해 2003년까지 16개국이 정책과제(Menu of Options)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4년까지는 전회원국이 이행보고서 제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WTO 투자 규범 논의에 기여할 목적으로 역내 양자간 투자 및 지역 투자 협정을 다자주의와 조화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02년에는 "지역과 상호 투자 규범 및 협정 워크숍" 등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양자간 투자 협정 및 지역 투자 규범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 교류를 활성화하였다. 2004년 1차 회의에선 IEG가 추구하는 투자관련 자유화의 실질적 결과 산출 및 논의 절차 효율화가 강하게 요구되었으며, 투자박람회나 연구프로젝트 등의 수행에 있어서도 다수 참가, 활용도 증진, 투자촉진 여부 등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요구하였다.

(3) 표 준

미래를 위한 파트너쉽을 표방한 2003년도 표준적합 소위원회(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SCSC) 회의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회원국들의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협정(EEMRA) 참여, WTO의

TBT, SPS 협정 이행에 기여하기 위한 능력 배양 프로젝트 운영 등이 논의되었다. 그밖에도 APEC 회원국들의 국제 표준 과의 일치화 작업이 진전을 보였으며, 공정 규제 관행과 관련해서는 성과에 기초한 규제의 중요성에 따라 회원국들이 자국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4) 전자상거래

전자 상거래 관련 APEC의 대표적인 협력기구인 APEC 전자상거래운영그룹(ECSG)은 APEC의 여러 회의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을 조정하고 작업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각국 전자상거래법제 비교연구 및 전자 무역, 소비자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분야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에 APEC 전자상거래 Blueprint, 2002년에 온라인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으며, 현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신뢰마크 상호인정, 전자상거래 프라이버시 Principle의 작성, 스팸메일에의 대처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03년 12월에는 2005년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전자상거래 분야 의제발굴을 위한 “2005년 APEC과 IT e-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5) 서비스

2003년 서비스 그룹(Group on Services, GOS)의 활동은 주로 통신, 운송, 관광, 에너지 관련 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GOS는 또한 정보수집 및 분석, 투명성, 정보 교류 등을 포함한 CAP(공동행동계획)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6) 에너지

2003년 APEC내 에너지 분야 논의는 에너지 장관회의와 EWG(Energy 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26차 EWG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되어 에너지 안보 및 각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을 비롯 우리나라가 제안한 APEC 역내 원자력협력 문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며,

EWG 부속회의로 “APERC 세미나” 및 “석유공동비축 워크샵” 등이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동회의 개최 뿐 아니라, 기술협력사업으로 원자력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2003년 APEC내 에너지 분야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4. 향후 전망

2004년 APEC내 우리나라의 역할은 다른 해보다 더욱 다양하고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05년 APEC 의장국으로서 2005년을 위한 준비단계로 칠레에서 개최되는 2004년 APEC 분야별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 부는 2004년 APEC내 무역, 전자상거래, 표준, 투자 및 에너지 분야의 논의를 주도하고, 분야별 기술협력 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APEC 무역·투자 자유화 달성을 위한(선진국-2010년, 개도국-2020년까지) 보고르 목표의 중간점검이 2005년에 실시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사전에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APEC 회원국들은 동 목표의 중간점검을 위한 준비를 2004년 각료회의시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다.)

2004년 APEC 주요회의 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6-1> 2004년 APEC 주요회의 일정

회 의 명	일 정	장 소
○ 정상회의	2004.11.20-21	칠레 산티아고
○ 각료회의	2004.11.17-18	칠레 산티아고
○ 분야별 장관회의		
・통상장관회의	2004.6.4-5	칠레 푸콘
・에너지장관회의	2004.6.4	필리핀 세부
・재무장관회의	2003.9.2-3	칠레 산티아고
○ 고위관리회의		
・제1차 고위관리회의	2004.2.23-3.3	칠레 산티아고
・제2차 고위관리회의	2004.5.24-6.2	칠레 푸콘
・제3차 고위관리회의	2004.9.25-10.4	칠레 산티아고
・공식 고위관리회의	2004.11.15-16	칠레 산티아고

제 4 절 ASEM 최근 동향과 대응

구아협력과 사무관 하윤진

1. ASEM 추진배경 및 경위

냉전 후 경제분야 중심의 급속한 세계화 추세 속에서 아시아, 북미, 유럽 등 3개 지역이 국제무역과 투자를 주도하는 3개축으로 부상함으로써 이들 3개 지역간 상호 대화채널 확립과 균형적인 발전은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안전보장에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북미·유럽 관계는 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TAFTA: Trans-Atlantic Free Trade Area)의 구상 등 여러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왔고, 아시아·북미 관계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와 여타 태평양 국가간 네트워크를 통해 꾸준히 발전되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그 비중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아시아·유럽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94년 10월 싱가포르의 고촉통 수상이 프랑스 방문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 Asia-Europe Meeting)'를 공식 제안하고 EU와 ASEAN 및 한국, 중국, 일본이 호응하여 지역간·지역별 고위관리회의(SOM)를 거쳐 '96.3월 방콕에서 제1차 정상회의를 개최·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98.4월 런던에서 제2차 정상회의, 2000. 10월 서울에서 제3차 정상회의 그리고 2002년 9월 코펜하겐에서 제4차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ASEM의 기본협력 방향이 설정된 제1차 정상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은 첫째, 정치안보분야에서 아시아-유럽간 새로운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구축·발전시키고 정치안보대화를 촉진하여 UN의 개혁노력 및 범세계적 군축노력을 지지, 둘째, 경제협력강화와 관련 다자주의체제의 강화와 무역·투자활성화를 위한 협력확대 및 민간기업차원에서의 협력증진, 셋째,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증진으로서의 인적자원개발 및 빈곤퇴치 등 개

발협력, 환경· 마약거래·테러·국제범죄 등 전세계적 이슈에 대한 협력 및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문화협력 도모 등이다.

‘98.4 런던 제2차 정상회의에서는 아시아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아시아 유럽간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EU등이 ‘고위기업인 투자촉진단(High-Level business mission)’을 아시아 지역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의장성명서에 채택되는 등 ASEM이 단순한 포럼이 아닌 가시적,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협의체로 발전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제1차 정상회의 이후 추진된 협력사업들인 ASEM 투자촉진행동계획(IPAP), 무역원활화행동계획(TFAP)등이 보고·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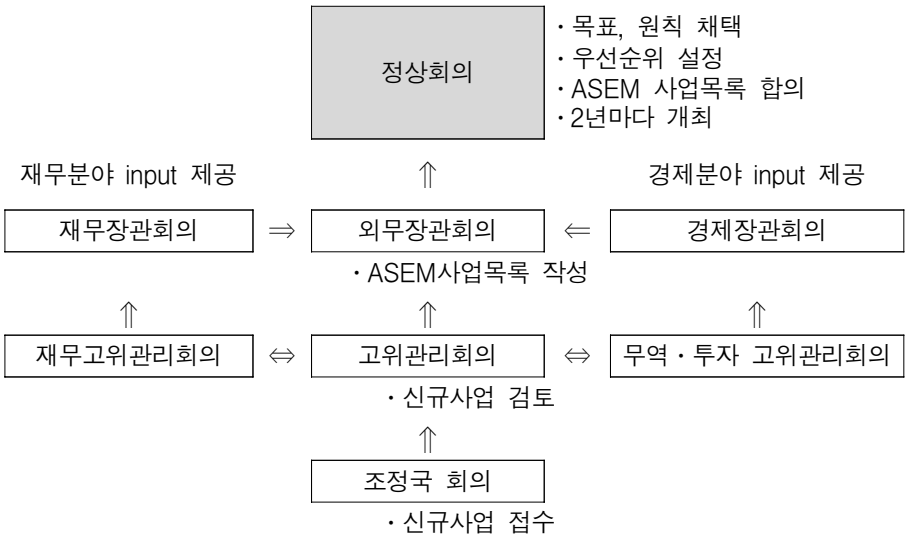
‘00. 10 서울 제3차 정상회의에서는 ’00년 아시아·유럽 협력체제,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 및 의장성명서 등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가 제안한 유라시아 초고속 통신망 구축사업, 정보격차 해소사업, ASEM 장학사업 및 세계화에 관한 라운드테이블개최 등 4개 사업을 포함해 모두 16개 사업이 승인되었다.

‘02. 9 코펜하겐 제4차 정상회의에서는 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ASEM 국가들의 강한 의지가 표명되었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아시아 유럽간 ‘철의 실크로드’라고 할 수 있는 유라시아 횡단철도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트랜스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망 사업경과도 보고하였다. 제5차 정상회의는 2004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 ASEM의 기본 구조

ASEM은 사무국 등 상설기구 없이 2년마다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차기 정상회의까지의 협력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외무, 경제, 재무 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정상회의 이후의 협력사업추진상황을 점검·승인하고 차기 정상회의에의 보고사항을 결정한다. 그리고 `고위관리회의(SOM), 무역·투자 고위관리(SOMTI)를 중심으로 협력사업 발굴 및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그림 III-6-2> ASEM의 기본구조



3. 최근동향 및 우리의 대응

ASEM 경제협력은 정부차원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경제장관회의, 1년에 1-2회 개최되는 무역·투자고위관리회의(SOMTI)가 있고 민간차원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아시아-유럽비즈니스포럼(AEBF)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ASEM 경제협력사업들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승인되어 정상회의에 보고되며, SOMTI가 각종 경제협력사업들을 실무적으로 이행, 감독하여 경제장관회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AEBF는 ASEM회원국들의 비중 있는 기업인들이 역내 경제활동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정부측에 권고안을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바, ASEM경제협력의 궁극적 목표가 역내 경제활동을 원활화, 자유화하는 것인 만큼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ASEM의 경제협력은 무역, 투자분야에서 채택된 TFAP(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IPAP(Invest Promotion Action Plan)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동 과정에의 적극적 참여 및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TFAP은 '96.7 제2차 SOMTI이후 추진되어온 협력의 체제로서 비관세 장벽 및 거래비용 감소, 무역기회 증진을 목표로 하여, '통관절차',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정부조달', '위생 및 검역', '기업인 이동', '지적재산권', '유통 및 기타 무역활동', 'ASEM 전자상거래 국제세미나' 등 8개 우선 추진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로 세부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아울러 각 분야별로 TFA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아시아 2개국, EU집행위 및 의장국이 간사국(shepherds)으로 선정되어 회원국들의 의견수렴과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우선 추진 분야별로 아시아, 유럽 1개국이 주도국(facilitator)이 되어 이행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IPAP은 아시아와 유럽간 및 이들 지역내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하여 양 지역간 투자흐름의 촉진을 목표로 하여 여러 세부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동 계획은 민간주도의 '투자촉진' 분야와 정부주도의 '투자규범 및 정책' 분야의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제조업, 인프라,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즉, '투자촉진' 분야는 기업간 교류(Business-to-Business Exchange), 화상정보교환(Virtual Information Exchange), 기업 정책결정자 간담회(Decision Makers' Roundtable) 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투자규범 및 정책'분야에서는 투자관련 현안과제에 관한 고위급 대화를 진행 중에 있다. IPA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일본, 태국, EU 집행위 및 의장국이 간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IPAP의 이행 및 기타 투자관련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투자정책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실무회의인 IEG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ASEM의 민간기업인 회의인 AEBF의 4차 회의가 전경련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되었고('99.9.30-10.1) 제5차 회의는 '00.9 오스트리아에서, 6차 회의는 '01.10 싱가폴에서, 제7차회의는 '02. 9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으며, 제8차 회의는 '03.10월 서울에서 개최되어 무역, 투자 및 인프라,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생명과학 및 의료산업 등 7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기업들의 의견 및 ASEM에 대한 권고사항을 수렴하였다.

ASEM에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ASEM

의 추진 방향은 장기적인 비전아래 초기단계의 APEC처럼 유연한 협력체로 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역·투자관련 부문 및 경제·기술 협력 등 양 지역간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적극적인 논의를 전개해 감으로써, 경제협력 논의에서의 주도적 역할과 경제적 실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원적 전략이 바람직하다.

ASEM에 참여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선진국 및 한국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ASEM에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개도국들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만큼 이들 시장에 대한 현재 및 미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견지에서 대개도국 경제협력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